

국세청 업무보고

2026. 7. 15.

I. 상반기 주요 성과

- ◇ 반칙과 특권, 비정상을 걷어내고 **조세정의**를 바로 세우는 한편,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**현장의 불합리**를 개선하고, 선제적·능동적 세정지원을 통해 **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**을 견인

1 반사회적 탈세 근절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

- (**물가 및 주식시장 탈세 엄단**) 국민 삶과 직결된 시장을 교란하여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는 **확실한 불이익**을 받도록 엄정 조사

물가상승 조장 탈세 차단	▶ ('25.9월~) 네 차례에 걸쳐 생필품 폭리 업체, 장바구니 물가불안 야기 업체 등 117건 조사, 3,195억원 추징, 33건 범칙처분
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근절	▶ ('25.7월) 상장법인 터널링 업체 등 27건 조사, 2,576억원 추징, 38건 범칙처분 ▶ ('26.5월) 주가조작 세력, 불법리딩방 등 31건 추가 조사 착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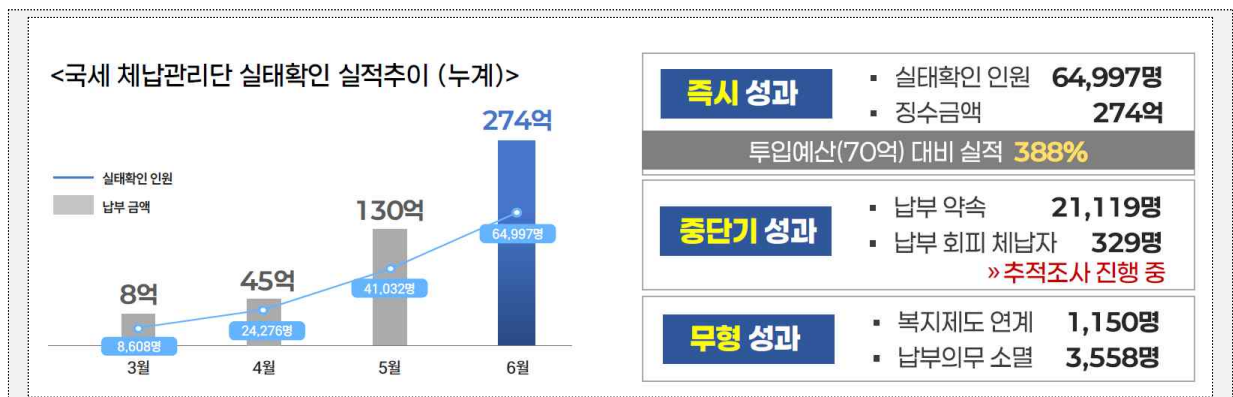
- (**부동산 탈세 대응**) 대출규제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유형 및 탈루행태에 **발빠르게 대응해 비생산적 투기수요를 억제**

비정상적 부동산 탈세 엄단	▶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등 시장 과열지역 부동산 탈세 398건 조사, 731억원 탈루규모 확인, 481억원 추징 → 가장매매로 중과규정을 회피하는 다주택자 등 조세포탈범 검찰고발 6명 및 통고처분 4명 ,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관할 지자체 통보 20명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(**민생침해 탈세 차단**) 온라인 환경을 교란하는 **가짜뉴스 유튜버**(14건, 107억), **암표 전문 판매업자**(16건, 21억원) 등 온라인 신종·호황 업종 탈세 엄정 대응

2 악의적 고액·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·징수

- (**체납관리단 출범**) 올해 출범한 「국세 체납관리단(500명)」은 6.5만명에 대한 실태확인 실시(3.5~6.30.), **총 274억원을 징수해 투입예산(70억) 대비 388% 실적**



- (**추적조사 강화**) 특별기동반 가동, 지자체 합동수색 등 징수역량을 집중하여 전년동기대비 2.4% 증가한 **1조 7,666억원 징수***(6월말 기준)

* '25.7월부터 '26.6월까지 최근 1년간 추적조사 실적 **3.0조원**으로 **역대 최대**

- **(민사소송 활성화)** 체납 전·후 특수관계자 간 재산이전, 허위 근저당 설정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**민사소송* 적극 제기**(^{'26.上}611건, 전년대비 +17%)
* 초고액·중요소송 대리인 경쟁입찰·**성공보수제 도입**(최대 10억^{3월}) → **보수한도 상향**(최대 30억^{7월})
- **(공매집행 강화)** 압류재산 일괄정비를 통해 중지된 공매를 **속행**하고, 징수실익은 없으나 **他조세채권 충당 가능한 재산도 적극 처분**(^{'26.上}2.3만건 의뢰, 전년대비 +61%)
- **(징수공조 확대)** 해외 과세당국과 실무협정 적극 체결*하는 등 징수공조 강화
→ 이재명 정부 출범 후, **전체 징수공조 실적**(437억원의 **90%**가 넘는 **404억원 환수**)
*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 국가: ('25.下) 호주, 인니 → ('26.上) 영국, 헝가리, 벨기에, 라이베리아

〈 주요 우수사례 〉

- ▶ (서울청 징세관실 6급) 외국 거주 체납자 A에 대해 ①해외정보교환 요청을 통한 국외재산 확인 후 ②거주국 징수공조 요청 ③체납자 대리인 면담 후 국외재산 매각자진납부 유도하여 332억원 징수

3 60년 세무조사 패러다임 **대전환**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

- **(①현장조사 최소화)** 현장조사는 '최대한 짧게, 꼭 필요한 경우에만' 실시하여 기업 내 조사팀 상주로 인한 **불필요한 경영부담 최소화**
* '25.10월 시행 후 6월까지 진행한 정기조사 325건 중 285건(88%)에서 상주기간 감축
- **(②시기선택제 시행)**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**희망하는 시기를 선택**(3개월 내) 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·주주총회 등 **경영상 중요시기**를 피해 조사 착수
*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개인 1,200만명과 법인 100만개 수혜 가능
- **(③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)** 세무조사 중 반복 적출되는 **신고오류** 등 **주요 검증항목***을 사전에 공개하여 **신고실수 예방** 및 **가산세 부담 경감**
* (예) 법인(사업용) 신용카드 사적 사용,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등 10개

4 **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선제적·적극적 세정지원**

- **(국민중심 세법해석)**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**폐업 소상공인, 산모·신생아 등 취약계층의 과중한 세부담 해소**
* ① 티몬 피해사업자 대손세액공제 339명, 150억원 환급 ②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7만 명, 107억 원 환급 ③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세(856억원 규모)
- **(영세납세자 지원)** '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' 서비스 확대*(연1회→2회), **간이과세 배제지역**을 제도 시행'00년 후 최초로 **전면 정비****해 **영세사업자 부가세 부담 완화**(4만명)
* 3월 인적용역소득자 등 111만명에게 1,409억원 환급 안내(9월 추가 안내 예정)
** 총 1,176개 지역 중 544개 정비→매출이 적어도 도시에 위치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못 받던 불합리 개선
- **(중소기업 회복 지원)** **중동전쟁 피해기업**(32만명)에 대한 **유동성 지원**(납기연장·조기환급) 및 **상생 성장**을 위한 **소상공인* 정기 세무조사 유예**(1,277만명)
*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(1,243만명),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(1.2만명), 스타트업(1만명)

II. 핵심 추진과제

《 '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》

- ◇ 반도체 호황, 국내 증시 활성화 등으로 양호한 세입 흐름*이 예상되나, 글로벌 패권 경쟁 속 '**초격차 산업강국**'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 전환기

* '26.5월 소관 세수 196.3조원(전년동기 +27.5조원), 추경대비 진도율은 48.2%(전년동기 +1.8%p)

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

'26년 추경	'26.5월 누계	'25.5월 누계	추경대비 진도율	'25.5월 누계
406.9조원	196.3조원 (전년동기 +27.5조원)	168.8조원	48.2% (전년동기 +1.8%p)	46.4%

'대체불가 대한민국'으로의 대도약을

튼튼한 재정·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

- ① **국세외수입 통합징수**, ② **채납관리 혁신**으로 국가재정을 채우고,
③ **조세정의 확립**, ④ **포용적 민생지원** 등 국세청 본연의 역할은 강화하며,
⑤ **국세행정 시대전환**으로 국세행정 혁신기반을 튼튼히 마련

1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국가재정 효율 혁신

국가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대한민국 재정혁신 선도, 국세 징수기관(Tax Service)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(Revenue Service)으로 도약

□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추진

- (**현황**)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개별기관(64개 부처, 4,500여개 기관)이 제각각 징수하는 비효율적인 관리체계로 국세외수입 누적 체납액 지속 증가*

* ('20년) 13.3조 → ('21년) 14.1조 → ('22년) 14.5조 → ('23년) 15.9조 → ('24년) 16.2조

- (**필요성**) 국세청이 분산되어 있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 → 재정수입 누수를 막고 책임 있게 관리하여 국가재정 효율화 필요

* 주요 선진국들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추세 : 미국(재무부 재정서비스국), 노르웨이(국세청), 스웨덴(집행청) 등

- (**기대효과**) 국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국세와 같이 소득·재산 정보 활용, 효율적 징수수단(압류·공매, 신용정보제공, 명단공개 등) 도입 → 징수율 획기적 제고*

* (징수율 비교) 국세 90% vs 과징금 73%, 과태료 40%, 변상금 22% 등

□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실행기반 신속하게 구축

◇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시스템에 구축, 국세 체납 인프라와 연계하여 축적된 징수 노하우 최대 활용

- **(근거법률 제정)** 「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*」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입법 절차** 충실히 지원
 - * 체납된 국세외수입 징수권한 국세청 일원화, 과세정보 활용, 효율적 징수수단 규정
 - ** '26.2월 재경위 민주당 의원 자체 법안 발의 → 4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(소위 회부)
- **(체납정보 통합구축)** 부처간 업무협약*(MOU)으로 산재해 있는 체납자 정보 확보 →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을 거쳐 **인별 국세외수입 통합정보** 구축**
 - * 경찰청, 공정위, 성평등가족부, 산림청 등 17개 부처와 체결('26.6월말 기준)
 - ** 인별로 부처별 국세외수입 체납액 정보 및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결과를 통합하여 구축
- **(전산시스템 마련)** 정보화전략계획(ISP) 사업 진행(7월) 및 '27년 본예산 확보 → 국세외수입 고지·체납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**통합관리시스템* 구축**
 - * 전 부처 국세외수입 체납내역 일괄조회·납부서비스 제공,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
- **(조직·인력 확보)** 통합징수법 시행에 맞추어 본·지방청부터 세무서까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세청의 징수 노하우를 갖춘 전담인력 배치

< 「국세외수입 통합징수」 로드맵 >

구분	기반구축('26년 下)	본격시행('27년~)
근거법률	「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입법 지원	「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
체납정보	- 부처별 국세외수입체납자정보 통합 -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정보 수집	국세 체납정보와 연계 ⇒ 인별 체납정보 통합구축 (국세·국세외 체납정보, 체납실태)
통합시스템	- 정보화전략계획(ISP) 사업완료(7월) '27년 본예산 확보(12월)	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국세행정시스템과 결합관리
조직·인력	- 체납관리단 운영인력 확보 - 전국 지방청 세무서 325명(7월) - 통합징수 조직·인력 확보 협의	- 전담조직 신설(본·지방청, 세무서) - 징수 전담인력 배치

2 국민과 함께 하는 체납관리 혁신

올해 3월 출범한 500명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발판 삼아
1만명 체납관리단도 반드시 성공시켜 '1석 5조' 정책효과 극대화

①조세정의 실현, ②재정 확보, ③생산적 일자리 확충, ④체납 일제정리, ⑤복지대상자 발굴

□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130조 체납 실태확인 체계 확립

- **(운영방향)** 3월 채용 500명에 더해 추경예산으로 9,500명 추가 채용, **총 1만명**이 전국 체납자 실태확인 실시 →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강화
- **(채용현황)** '쉬었음 청년' 대상 집중 홍보(청년지원센터 협업, 온라인 광고 등) 결과, 최종 합격자 5,403명* 중 2·30대 청년층은 2,257명으로 **41.8% 점유**
* (연령대별 채용현황) 2·30대 41.8%, 4·50대 37.4%, 60대 이상 20.8%

- **(운영체계)** 총 9,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, 세무서 단위로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함께 운영

구 분	국세		국세외수입	
	상반기	하반기 1차	하반기 1차	하반기 2차
채용규모	500명(지방청)	2,500명 (세무서)	3,000명 (세무서)	4,000명 (세무서)
근무기간	'26. 2. 26. ~ 10. 8.	'26. 7. 1. ~ 12. 23.	'26. 7. 1. ~ 12. 23.	'26. 10. 1. ~ 12. 23.
체납규모	114조원, 134만명 (25년말)	좌동	16조원, 424만명 (‘26.5월)	

□ 역량 극대화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설계

- **(쾌적한 근무환경 조성)** 통일된 사무공간 지침을 바탕으로 관서 내(66개) 또는 임차(67개) 사무실을 마련하고, 주변기기(공기청정기·정수기 등) 및 주차공간 완비
- **(안전·보안 강화)** 책임보험^{최대1억} 및 상해보험^{최대5천만}으로 근로자 두텁게 보호, 업무용 단말기*에 다중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차단
* 국가데이터처로부터 태블릿PC 5,000대를 대여하여 **페이퍼리스 업무시스템** 구축
- **(역량·성과 관리)** 지역별 집합 직무교육* 및 세무서별 상시교육 실시, 실태확인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유급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 부여
* 7.1~7.7 전국 24개 교육장 5,403명 집합교육(국세청장 강연 실무교육 등) → 자긍심 고취 및 실무역량 함양

□ 맞춤형 실태확인 및 철저한 후속집행으로 운영성과 제고

- **(맞춤형 실태확인)** 소액·다수건(예 : 경찰청 과태료)은 전화상담 비중을 높이고, 고액·방문회피건은 국세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장확인 실시
* ①단순 소액체납은 즉시납부·분납 안내 ②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전담부서에 인계하여 추적조사 실시
- **(복지대상 지원)**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을 신속 진행하고,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체납자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지원

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으로
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공정사회 실현

① 반사회적 탈세행위 근절에 전방위적 총력 대응

□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 대응

- **(물가상승 탈세 척결^{정상화})** 가격담합,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며 부당하게 폭리를 챙기는 탈세자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

▶ 원가상승을 핑계로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 과다 지급한 생필품 제조업체
▶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가격을 올린 독·과점 기업

- **(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엄단^{정상화})** 주가조작·터널링, 불투명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 상속·증여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행위는 반드시 적발·차단

▶ 매출을 뺏기려는 '뽕뽕이 거래'로 주가조작하고,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회피
▶ 정상거래에 사주법인을 끼워넣는 등 우회적으로 기업이익을 유출하는 '터널링'

- **(국부유출 차단)** 법인의 재산·소득을 국외로 부당 유출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추징

▶ 현지법인 설립하여 지분투자 명목으로 외환 송금 사주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·채류비 등에 사용
▶ 사주 명의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국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비자금 조성

- **(법인자금 사적유용 근절^{정상화})**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초고가주택, 법인명의 슈퍼카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자는 철저히 부당이득 환수

▶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상복합 아파트를 사주가 15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한 소위 '황제사택'
▶ 수억 원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골프,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

□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편법적 탈루행위 엄단^{정상화}

- **(공익법인 관리 강화)**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등 공익법인을 통한 사익 편취 및 변칙적 회계처리, 부당 내부거래 등 의무위반* 혐의 검증

* 해외여행, 골프장 이용 등 기부금 사적사용 및 특수관계인에게 출연재산을 무상·저가 제공 등

- **(법인 이용 편법증여 차단)**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양도 하거나 자금을 무상대출하는 등 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거래 엄단

□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**부동산 탈세** 근절 **정상화**

- **(변칙거래 근절)** 「부동산 탈세 신고센터*」에 접수된 제보는 철저히 검증,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후 우려되는 저가양도, 가장매매 등 세부담 회피행위 엄단
* '25.10월 설치 후 '26.6월까지 부동산 탈세제보 1,168건 접수
- **(자금출처 검증 철저)** 초고가 주택(30억원 이상) 거래 전수검증을 지속하고, 고액현금·사적채무를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 취득자도 정밀 검증
- **(사업자대출 전수점검)** 사업자대출을 개인주택 취득에 유용하고, 대출이자 등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경비 처리하는 탈루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
- **(외국인 주택거래 점검)**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*, 외국인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누락 등을 철저히 점검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차단
*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거주자로 위장

② **악의적 고액·상습채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**

□ 지능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회피하는 **위장탈세** 근절 **정상화**

- **(민사소송 활성화)** 정상거래로 위장한 특수관계자 간 재산 이전, 위장 상속 포기, 상속 미등기 등 고액채납자 사해행위 관련 민사소송* 적극 제기
* 사해행위 취소, 허위 근저당·가등기 말소청구,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등
- **(압류자산 적극공매)** 압류 부동산을 계속 이용하며 고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방해하는 체납자들의 미공매 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 적극 실시
* 분납 불성실 이행 시 신속 공매,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기관 협의 및 말소소송 등을 거쳐 공매
- **(추적조사 강화)** 고액채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*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고, 지자체·관세청 합동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 전개
* ①대여금고 ②허위 근저당·가등기 설정 ③수표 발행 후 은닉 ④고가외제차 리스보증금 등

□ 국경 없는 견고한 공조체계로 해외 은닉재산 환수 **정상화**

- **(전략적 정보교환)** 자산은닉 개연성이 큰 국가*와 양자회의 개최·협약 체결 등으로 정보공조를 강화하여, 체납자 해외자산 정보 정밀 수집
* 캄보디아('26.3월), 라이베리아('26.6월) 등과 정보교환 실무협약 체결 → 체결국가 확대 진행 중
- **(징수공조 강화)** 해외 과세당국과의 실무협정(MOU) 체결을 확대하고, 수집한 은닉재산 정보를 토대로 징수공조 실무자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신속 환수 추진

4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

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따뜻한 세정으로
‘함께 윈윈(Win-Win)’하는 국민균형성장 적극 뒷받침

① K자형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상생형 세정지원

□ 청년층 자립 지원 강화로 미래세대 사회진출 기회 확대

- **(고용지원)** 하반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 시(10월, 4천명), 청년층 대상 집중 홍보로 ‘쉬었음 청년’에 대한 생산적 일자리 기회 제공 확대
- **(창업지원)** 청년 창업자를 위한 「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」 서비스를 시행하여 공제·감면 컨설팅, 신고일정 안내 및 세법교실 지원 등 통합형 세정지원 제공

〈 현장 목소리 〉

▶[청년기업 대표] “청년 창업자들은 창업 초기에 세무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고 행정업무 부담 등 사업 운영이 어려워 국세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.”(‘26.6.18. 국세청장 청년창업자 간담회)

- **(재기지원)** 실(퇴)직 청년에 대한 학자금 상환유예* 절차를 간소화하고, 생계곤란형 체납자 지원제도** 등을 통해 폐업 청년 등의 경제활동 복귀 뒷받침

* 건보공단을 통해 대출자의 실(퇴)직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유예 승인

**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, 재기 영세사업자 징수곤란 체납액 가산세 면제 등

□ 지방기업 세정 우대로 범정부 「지방주도성장」 추진을 뒷받침

- **(투자 인센티브 제공)** 지방 이전 중소기업이 세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,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, 세법해석 패스트트랙* 등 밀착 지원

* 투자 관련 법인세 질의회신 우선처리 + R&D 사전심사/공제·감면 컨설팅 우선처리

- **(조사유예 우대)** 정기 세무조사 유예* 대상 중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우대혜택 신설(수도권 2년)

* 고용, 창업, R&D, 투자, 수출, 일·가정 양립, 물가 안정 등 7개 분야에 세무조사 유예 혜택

□ 성장에서 소외된 위기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

- **(납부부담 완화)** 고환율,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,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

* 고환율피해(1.7만), 청년창업자(26.4만), 소상공인(43.1만), 간이과세자(31.4만) 등 총 103만명 대상

- **(세무조사 유예)** 고물가 등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매출 10억미만 소상공인(약 1,200만명)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('26.6월말→12월말)
 - **(장려금 지원강화)** 장려금 간편신청 대상자를 확대하고, 자격 심사 시스템 개선*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적시 지원
- * 수동심사 항목(주택소재지 비교 등)도 전산심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교화

②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

□ 국제적 세정협력 강화로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 기반 마련

- **(양자교류 다변화)** 주요 교역국(일·베·인도 등)과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멕시코·우즈베크 등 성장 잠재력*을 가진 국가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·강화
- * (멕시코) 중남미 최대 교역국 (우즈베크) 중앙아 거점 국가로 다수의 건설·에너지기업이 활동 중
- **(현지밀착 지원)** 국세관-현지 과세당국 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환급 지연 등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현지에서 신속하게 대응·해소

< 현장 목소리 >

▶ [베트남 진출기업] "수출품 부가세 환급이 1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에서, 국세관이 현지 공론화 재무부 차관 면담 등 적극 노력해주신 결과 환급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."

- **(전략적 상호합의)**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과 K-문화 선도산업(뷰티·식품) 등 주요 산업이 진출한 국가와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* 우선 추진
- * 세무조사 등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,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세조약상 절차

□ 지역 중소기업·외국계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세무 불확실성 해소

- **(해외진출 중소기업)** 중소기업 대상 「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(K-Tax Navigator)」을 출범하여 지역별 특화업종*을 고려한 '해외진출 전략 세무강연회' 개최
- * (서울) K-뷰티 (판교) AI 스타트업 (인천) K-바이오 (대전) R&D (여수) 석유화학 (대구) 자동차 등
- **(외국계기업)** 외국계기업 대부분(84.6%)을 관할하는 수도권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,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방안* 제공
- *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고내용확인 면제(1년) 및 R&D 세액공제 우선 심사

5 「AI 대전환」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

국민 효능감이 큰 세정 서비스부터 AI를 우선 도입하여,
①납세서비스 혁신, ②공정과세 구현, ③세정 효율화를 이끄는 「K-AI」 국세행정 구현

□ 공공분야 AI 전환을 선도하는 AI 세정혁신 본격 추진

- **(목표)**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국세행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 추진
* (홈택스) 이용자수 4천만명,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2위, (손택스) 공공앱 다운로드 1위
- **(추진전략)** 국민과 접점이 가장 넓은 납세서비스 분야부터 공정과세·세정효율화 분야까지 AI 전환을 단계적 확대 → “**공공 AI 선도모델**” 구현

< 국세행정 AI 대전환 로드맵 >

핵심기반 구축 ('26.下)	본사업 착수 ('27)	핵심과제 개통 등 전 분야 확산 ('28~)
• 국민체감과제 우선도입 • 예비타당성조사-ISMP	• 핵심과제 개발 • AI 인프라 도입	① 납세서비스 혁신(AI 전자신고, AI 세금 컨설턴트) ② 공정과세 구현(AI 탈세적발 시스템, AI 체납관리) ③ 세정 효율화(AI 업무지원, AI 자료처리 지원)

□ 국민 체감형·현장 수요형 과제부터 AI 활용 시작

- **(납세서비스 혁신)** 국민들이 ‘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,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이’ 클릭 몇 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‘AI 전자신고’ 단계적 구현('27년~)
* ‘생성형 AI챗봇’(26.1월)에 더해 ‘홈택스 AI검색’(26.11월), ‘AI 전화상담’(26.12월) 우선 제공
- **(공정과세 구현)** 과거 조사사례·노하우 등을 수집하여 고도화된 빅데이터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‘AI 탈세적발 시스템’* 설계('26.12월)
* 탈루유형 발굴, 고위험 탈루혐의자 추출, 조사 도움자료 검색, 조사자료 분석 등 수행
- **(세정 효율화)** 서면신고서 입력 등 직원의 수동업무를 자동화하고, 단순·반복업무를 줄여 최적의 업무프로세스를 지원하는 ‘AI 업무지원’ 제공('26.12월)
* ‘체납자 민사소송 AI 소장 작성지원’ 개발(26.7월), ‘AI 법령정보’ 시범운영 후 점진적 확대(26.11월)

□ 「AI 대전환」의 국세행정 쏠 분야 확산을 위한 실행기반 확보

- **(보안체계 확립)** 개발 - 활용 소과정 적용 ‘개인정보 보호 매뉴얼’ 및 AI 운영정책* 수립, AI에 대한 민감정보 접근권한 통제로 안전한 AI 환경 조성
* 「AI 기본법」(26.1월 시행)에 대응한 위험관리·사용자 보호·권리구제·관리 감독 방안 등
- **(전문역량 강화)** AI 전문기관 자문으로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하고, 연계 교육*을 통해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까지 주도할 내부 AI 전문인력 양성
* (카이스트) 국세행정 특화 단계별 교육, (서울대) 실제 시범과제를 개발하는 실습형 교육

성과지향형 업무환경, 합리적 인사운영, 직원보호·공직기강 확립으로
구성원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직 구현

□ 직무 몰입을 유도하는 성과지향형 업무환경 조성

- **(성과포상금제 운영)** 국세청 업무특성을 반영한 성과포상금(부과 징수·승소) 지급*과 특별한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(최대 3천만원)으로 성과중심 공직문화 조성
* '26년 상반기 부과·징수·승소 분야 포상금 총 990백만원 지급
- **(전문직위 확대)** 일선 격무분야(소득·법인·체납) 및 AI혁신 분야(정보화)에 전문직위를 신설(수당 지급 및 근무평정 우대), 분야별 전문가 적극 양성
- **(비생산적 일 줄이기)** 부서별 자체진단·직원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과제발굴 → 업무량 감축효과가 큰 중점과제* 위주로 이행점검 지속
* 부서 간 유사·중복업무 통폐합, 형식적 보고·회의 감축, 실효성이 낮은 평가지표 삭제 등

□ 공정, 성과, 균형에 기반한 합리적 인사 운영

- **(공정한 절차)** 임용구분, 지역·성별,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오직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 대상자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* 운영
* ① 지방청 추천 ② 본청 전문평가 ③ 블라인드 평가(직원 대표) 등 3단계를 거쳐 특별승진 심사
- **(성과기반 보상)** 신규업무(체납관리단 등) 및 격무분야 등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수인력에 대한 수시승진 실시
- **(지역균형 채용)** 만성적 인력 이탈을 겪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인재를 별도 선발 → '27년까지 전국 확대 추진('26.1월 강원권 구분모집)

□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 및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

- **(직원보호 강화)**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악의적 민원은 '직원보호 전담팀'을 통해 적극 대응*하고, 청사 내 안전요원을 매년 확대 배치**
* '25.11월 출범 후 피소 34건 위법·부당민원 59건에 대해 법률자문 및 수사기관 동행 등 지원
** '25년 60개서^{완료} → '26년 76개서^{완료} → '27년 91개서^{목표} 등 지속 확대
- **(구조적 비위 차단^{정상화})** 사적이해관계 사전검증 시스템 개통(6월말~), 정보보안팀 인력보강 및 자료반출 통제체계* 강화로 과세정보 유출 사전 차단
* 보안시스템 리스크 탐지(개인정보 포함, 대용량·반복 반출) → 직원 소명 → 보안부서 심층 검토
- **(갑질행위 근절)** 갑질 신고·상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현장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갑질 등 조직 내 일탈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